

「해경 역사」

해양경찰 64년간의 기록

Chapter 1. 해양경찰 60년사

Chapter 2. 지난 4년간의 기록

Chapter 1

해양경찰 60년사

60 years

Korea Coast Guard



국민행복을 위해 걸어온 60년의 기록

1953~1968년

I. 해양경찰대, 해양주권 수호의 첫발을 딛다

1969~1983년

II. 해상치안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다

1984~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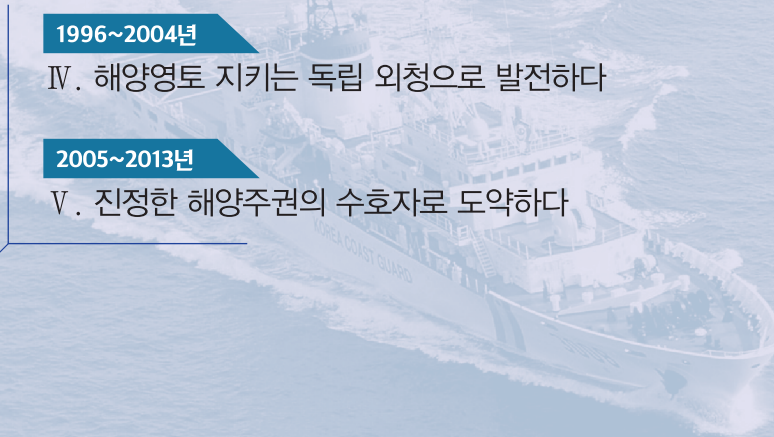
III. 해양경찰의 자주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다

1996~2004년

IV. 해양영토 지키는 독립 외청으로 발전하다

2005~2013년

V. 진정한 해양주권의 수호자로 도약하다



1953~1968년

I. 해양경찰대, 해양주권 수호의 첫발을 딛다

‘해방병단’과 해양수호 역사의 시작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직후 국내에서 손원일 등 해군 창설에 뜻을 같이 하는 일단의 인사들이 모여 ‘해사협회(海事協會)’를 결성하였고, 1945년 11월 11일 미 군정청의 인가를 받아 서울 관훈동의 표훈전에서 결단식을 갖고 ‘해방병단(海防兵團)’을 창단하였다.

발대식과 함께 손원일을 초대 단장으로 선출하고 단원과 사관후보생을 모집하면서 국방사령부로 편입함과 함께 진해에 충사령부와 해군병학교를 조직하는 등 해안경비대를 창설하는 일을 추진하였다.



▶ 해방병단 창설 기념(1945. 11. 11)

해양경찰 기능 수행한 ‘조선해양경비대’ 창설

1946년 6월 15일 해방병단은 미 군정청의 승인을 얻어 기존의 조직을 계승한 ‘조선해양경비대(Korea Coast Guard)’를 정식으로 창설하면서 대원 전체를 계급체제로 조직화하고 목포·목호·부산·진해·군산·포항 등에 잇따라 기지를 설치하면서 조직을 정비하였다.

9월에는 조선해양경비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방한한 코스트가드(USCG) 자문단의 조언을 참고하여 조선해양경비대의 운영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이 때 자문단 지원활동과 관련된 〈The Coast Guardsman's Manual〉이라는 책자를 보면 “1946년 Korea Coast Guard를 조직·관리하고 훈련하기 위하여 코스트가드 팀을 서울로 보냈다. 이 조직이 해양경찰이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조선해양경비대가 한국해군의 전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양경찰의 뿌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선해양경비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방부 훈령 제1호에 따라 ‘해군’으로 개칭되었고, 국방의 임무를 띤 명실상부한 해양군사조직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에 따라 해군은 군사작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면서, 해양주권 경비 임무도 동시에 담당하는 해상치안활동의 주체로 활동하였다.



▶ 조선해양경비대(1948)

1953년 12월 23일 '해양경찰대' 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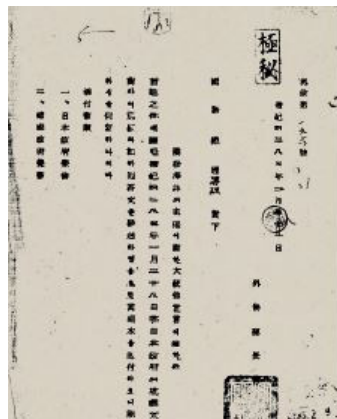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해군이 창설되었지만 창군 초기 해군의 전력은 극히 취약하였고 일본어선들은 기존의 맥아더라인을 넘나들며 우리 해역의 어장에서 불법어로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1년에는 미국과 일본이 평화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맥아더 라인이 철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어선들의 불법행위는 극에 달하였다.

이에 정부는 우리 해양의 천연자원 개발과 어업자원 보호가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고 인식하고,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해양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하고 이날 60마일의 해역을 대한민국의 주권선으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선'이다.

평화선은 우리 해역의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한 해양주권선으로, 어업기술이 월등한 일본과의 어업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공산세력의 연안침투를 방지하며, 세계 각국의 영해 확장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인 선언이었다.

평화선 선언 이후 정부는 평화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53년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하고, 평화선 수역 내 외국선박의 불법어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였다.

평화선이 설정되고 3개월이 지난 1952년 4월 25일 맥아더라인이 철폐되었고,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상태로 접어든 이후 8월 30일 북방한계선(NLL)이 설정되었다.



▶ 인접해양의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1952. 1. 18)

이로써,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영해의 범위가 평화선과 북방한계선으로 명확해졌으나 아직까지 해상치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일본어선들은 전쟁 직후 해상치안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불법어로행위를 일삼았고, 이 때문에 일본어선들을 추출 및 나포하고 적색불순분자들의 침입을 예방하는 등의 해상경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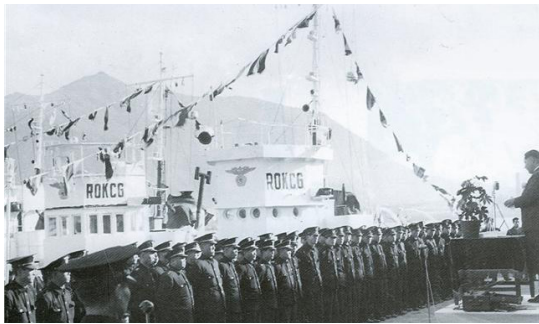
그러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일시적 휴전상황에서는 현 해군병력만으로 전투작전과 해양주권선 수호라는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군대가 민간 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것은 군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국제법상의 질서에도 위배된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해양주권선 경비임무는 경찰이 담당하여 수행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1953년 10월 5일 정부는 해양경찰대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 12월 12일에는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

하였고, 12월 14일에는 「해양경찰대 편성령」(대통령령 제844호)을, 16일에는 「해양경찰대 편성령 시행규칙」(내무부 훈령 제11호)을 공포하여 해양경찰대의 설치를 명문화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12월 23일 부산항 해양경찰대 기지에서 발대식을 갖고 해양경찰대가 창설되었고, 해군이 사용하던 181톤급 AMC 소해정 6척을 인수하여 본격적인 해양경비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해방병단에서부터 시작된 해양경비업무는 조선해양경비대와 해군을 거쳐 새로 창설된 해양경찰대로 이관되었다.



▶ 해양경찰대 발대식(1953. 12. 23)

창설초기 조직체제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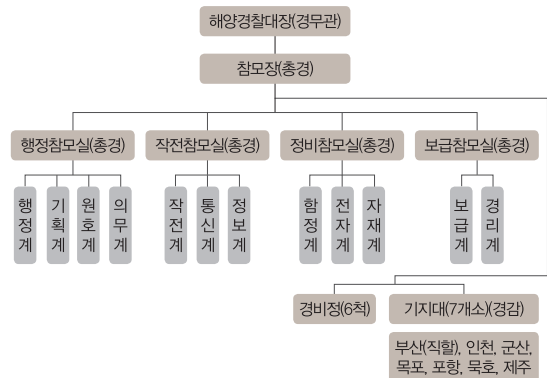
1953년 12월 23일 창설 당시 해양경찰대는 정원 658명에 181톤급 소규모 경비정 6척을 가진 작은 조직이었다. 초대 대장에는 해군 대령 예편과 동시에 경무관으로 임명된 이상열 대장이 보임되었고, 군의 조직 체계를 준용하여 대장 산하에 총경급의 참모장과 행정참모·작전참모·정비참모·보급참모 등 4개 참모조직을 두었다.

현장조직으로는 부산을 비롯하여 인천, 원산, 군산, 목포, 포항, 묵호, 제주 등 7개소에 경감급의 '기지감'을 책임자로 하는 해양경찰기지대와 해양순찰반을 각각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최초의 기구조직은 해양경찰대장, 참

모장, 4참모실, 12계, 7기지대로 편성돼 운영을 시작하였다.

1955년 2월 7일 정부는 해양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양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해무청'을 신설하였고, 해무청 내에 수산국, 해운국, 시설국을 두고 '수산, 해양경비, 조선, 항만공사에 관한 사무와 일반항만 및 해운행정 등 해양 관련 업무'를 일괄 관장토록 하였다.



▶ 창설 당시 해양경찰대 기구조직(1953. 12. 23)

이에 따라 해양경찰대는 창설 1년여 만에 소속부처가 상공부 산하 해무청으로 이관되고, 조직 명칭도 '해양경비대'로 개칭되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대장은 3급 갑(甲) 직급인 서기관급의 해양경비과장이 겸임토록 하였고, 해양경찰의 계급도 총경·경감·경위는 경령·경정·경위로, 경사는 경조장·일등경조·이등경조로, 순경은 해군의 사병계급과 유사한 삼등경조·일등경수·이등경수로 새로 정비하였다.

하지만, 1955년 12월 흑산도 서남쪽 근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181톤급 866정이 중공어선단과 교전을 벌이다 대원 4명이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해양경찰대의 전력을 강화하고자 1956년 7월 23일 해무청 훈령 제12호에 의거

하여 '해양경비대사령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참모장 제도를 다시 부활하고 참모조직을 재구성하였으며 본부사령실과 본부통신대를 신설하는 한편, 현장조직도 개편하였다. 군과 경찰의 조직체계 및 운영방식을 혼용하여 운영해 오던 해양경찰은 이를 계기로 사실상 군 조직과 유사한 조직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기존의 7개 기지 가운데 부산기지대를 폐지하고 나머지 6개 기지는 '기지사령'으로 개칭하였다.

하지만, 1957년 재정이 부족해진 정부가 예산절감 시책을 전개함에 따라, 해양경비대사령부는 1957년 11월 6일 '해양경비대' 체제로 복귀하였고, 기지사령도 원래의 기지대장으로 복원하되 인천, 군산, 포항, 묵호 등 4개 기지대를 추가로 폐지하여 목포, 제주 등 2곳에만 기지대를 남겨두었다.

해양경찰대설치법의 제정과 내무부로의 소속복귀

1961년 10월 2일 행정간소화 및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이때 해무청이 해체되면서 해양경비대는 원래의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이관되어 '해양경찰대'로 복원되었다.

이후, 해상치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62년 4월 3일 「해양경찰대설치법」을 제정하여 해양경찰대의 사법권을 강화하면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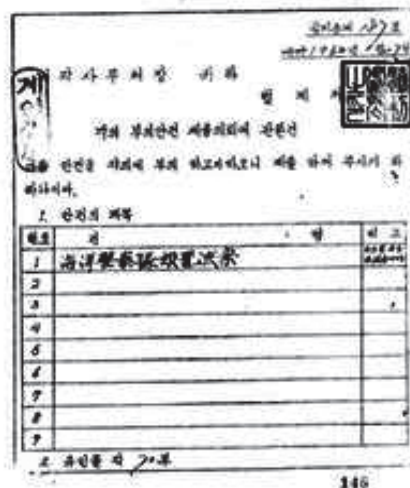
이 법에는 해양경찰대가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한 관할수역 내의 범죄수사와 기타 해상에 있어서의 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여, 어업 자원 보호에 한정하여 제한된 사법권이 부여되었던 종전과는 달리, 어족자원 보호는 물론 간첩의 해상침투 방지, 밀수·밀항자 단속 등 거의 모든 해상사법권이 부여되었다. 더불어, 대장은 행정부이사관, 부대장은 경무관으로 격상하여 보임하도

록 하는 한편, 해양경찰대 하부조직의 직제와 소속 공무원의 직종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하게 하였다.

「해양경찰대설치법」은 창설 이후 10년 가까이 불비한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소속기관마저 오락가락하며 열악하게 운영되던 해양경찰대가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2년 5월 1일 발대식을 갖고 보다 의욕적으로 해양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해양경찰대는 군대식 직제에서 벗어나 경찰식 직제로 재편하였다. 즉, 참모장 제도를 폐지하고 대장 휘하에 경무관급의 부대장을 두도록 하였으며, 산하에는 참모실 대신 경무과, 경비과, 정비과, 통신과 등 4개 과를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폐지되었던 5개 기지대를 복원하여 원래대로 총 7개 기지대를 재가동하였다.

해양경찰대가 군대식 편제와 계급체계에서 벗어나 경찰직제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해양경찰이 한층 더 성숙한 경찰조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다.



▶ 법률 제1048호 「해양경찰대설치법」 국무회의 자료(1962. 4. 3)

1969~1983년

Ⅱ. 해상치안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다

1970년대 전후의 해상치안 상황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업화·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해상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해양에서 밀항과 밀수, 사기, 해상폭력, 살인 등 각종 범죄와 사고가 급증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기본조약과 더불어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해양분쟁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일본어선들은 대규모로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을 일삼았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해상을 통한 북한의 도발이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1960년대 후반 들어 북한은 동·서해의 어로한계선을 남하하여 월선조업을 하는 것은 물론, 은밀하게 간첩선을 침투시키거나 우리 어선을 압류하고 어부들을 납치한 후 세뇌교육을 시켜 귀향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어선들의 평화로운 조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해상치안수요 급증에 따라 1960년대 중반 무렵에는 경비정을 확충하기 위한 ‘경비정 건조비 모금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기도 하였고, 정부도 1969년 들어 해양경찰대의 기능을 대폭 확장하고, 함정세력을 증강하는 등 경비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해양주권 수호자로서 면모를 갖추가기 시작하였다.



▶ 경비정 모금운동 보도(1964. 10. 27, 동아일보)

어로보호본부 설치 및 속초기지대 신설

1960년대 들어 동·서해의 어로한계선을 조업하는 어선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북한 경비정에 의한 우리 어선의 피랍사건이 빈발하였고, 우리 어선의 피랍사태를 방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동해의 어로한계선 부근 명태어장에는 성어기 때 집중적으로 우리 어선들이 월선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어선들의 월선 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1968년 11월 5일에는 동해해역의 강원도 고성군 거진리에 묵호기지대 소관인 ‘거진전방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이는 전방어업기지인 거진항을 중심으로 강력한 어로보호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서해해역에는 이듬해인 1969년 3월 15일 경기

도 부천군(현 용진군) 덕적도에 ‘서해어로보호본부’를 설치하여 어로보호활동을 전개하였다.



▶ 서해어로보호본부 개소식(1969. 3. 15)

이때부터 해양경찰대가 공식적으로 어로보호업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서해어로보호본부’는 국방부(해군), 농림부(수산청) 등 관계기관간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해 7월 18일 내무부령 제40호에 의거하여 해양경찰대 기지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면서 ‘속초기지대’와 ‘연평기지대’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1969년 11월 1일자로 속초기지대는 발대식을 갖고 기존의 ‘거진전방지회소’를 흡수·통합하여 임무를 시작하였고, 이에 맞춰 동해해역에도 ‘동해어로보호본부’가 발족하였다.

하지만 ‘연평기지대’는 지리적인 여건 등의 사정으로 발대하지 못하고 폐지되어 기지대는 8개소로 운영되었다.



▶ 동해어로보호본부 개소식(1969. 11. 1)

그후 1972년 4월 17일 정부 4개 부처 합동부령으로 「선박안전조업규칙」이 제정되면서 ‘동해어로보호본부’는 속초지구해양경찰대에, ‘서해어로보호본부’는 인천지구해양경찰대에 상설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이때부터 어로본부의 본부장은 해당 지구대장(기지대가 추후 지구대로 변경)이 겸임하게 되었다.

정보수사와 신설-정보수사 기능의 확장

서해와 동해에 어로보호본부가 발족하여 해양경찰대의 임무가 확대되던 그 시기에, 해양경찰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또 한 차례의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경무과, 경비과, 정비과, 통신과 등 4개과 체제로 운영되던 기존 조직에 정보수사과를 신설하여 5개과 체제로 조직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로써 해양경찰대가 해안경비임무와 더불어 정보와 범죄수사 등 본격적인 경찰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상치안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9년 9월 20일 해양경찰대는 「해양경찰대 직제 개정령」(대통령령 제4065호)에 따라 기구조직을 일부 개편하면서 정보수사과를 신설하고, 그동안 경비과에 속해 있던 정보수사 업무를 확대·독립하여 정보수사과로 이관하였다.

전투경찰순경 제도의 시행과 인력의 증원

1970년 12월 31일 「전투경찰설치법」에 따라 19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투경찰순경’을 모집하여 현장에 배치하였다.

전투경찰순경제도는 병역의무자가 경찰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대체근무제도로, 제도 시행 첫 해에 해양경찰대는 공무원 정원 외에 총 244명의 전투

경찰순경을 배정받았다.

1971년 3월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244명을 모집하고, 4개월간 해군신병훈련 및 자체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한 후 그해 10월 13일 실무 배치하였다.

또한 해양경찰대는 늘어난 경찰인력과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971년 7월 14일 '해양경찰대교육대'를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 전투경찰순경 1기 수료기념(1971. 9. 18)

지구해양경찰대 중심으로 운영체제 개편

해양경찰대는 해상경비와 해상범죄단속, 어로보호, 해난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했는데, 이를 본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72년 5월 6일 정부는 「해양경찰대 직제」(대통령령 제6162호)를 일부 개정하여, 기존의 기지대를 '지구해양경찰대'로 개칭하고, 각 지구대가 독자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관할구역의 책임경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1972년 6월 2일 「지구해양경찰대의 조직과 명칭,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내무부령 제111호)을 제정하여 각 지구대에 하부조직으로 경무과, 경비통신과, 정보수사과를 두었고, 이와

함께 부산에도 '부산지구해양경찰대'를 신설하여 부산지역의 치안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대는 본대에 5개 과를 두고 하부조직으로는 9개 지구해양경찰대를 편제하여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다.

863정 피격 사건과 해양경찰대 전력 증강 계획

1970년을 전후한 시기는 북한의 도발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 시기로 북한은 수시로 간첩선을 내려보내고 우리 어선을 납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였다.

급기야 1974년 6월 28일에는 해양경찰 863정(181톤)이 북한 함정과 교전하다 피격되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863정에 탑승하고 있던 28명의 승조원 전원이 사망 또는 실종되어 정부는 물론 전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다.

863정 피격사건이 있는 직후 박정희 대통령은 해양경찰대의 현주소를 명확히 파악한 후 전력 증강 대책을 세우기 위해 군특명검열단으로 하여금 해양경찰대의 체제와 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열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군특명검열단의 검열 결과 해양경찰이 안고 있는 각종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는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해양경찰대의 전력을 증강하고 조직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 863정 전사자 위령제(1974)

먼저 지구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구대 청사 신축과 더불어 해양경찰대원의 정신전력과 작전 및 임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1974년 8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0일 동안 ‘정신력 강화 100일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작전예규와 전시대 비지침서, 직능별 학습지침서 등 각종 매뉴얼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는 추후 1977년 ‘해양경찰대 전력화 계획’으로 이어져 해양경찰대의 체질을 개선하고 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확정된 계획안에 따라 함정장비의 증강을 위한 건조계획이 추진되고 통신장비가 순차적으로 보완되었고, 1978년 1월부터 해군교육단 내에 ‘해양경찰교육대’가 신설돼 위탁교육이 실시되었다.



▶ ‘정신력 강화 100일 훈련’ 중 인명구조훈련(1974)

해양경찰 인력의 증원 및 치안본부 발족

863정 피격사건 이후 해양경찰의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양경찰대의 전체 정원이 큰폭으로 증원되었다.

1975년 5월 30일 시행한 직제 개정에서는 정비과를 정비보급과로 개칭하고 경무과에 있던 물품관리 및 무기탄약관리 업무를 개칭된 정비보급과로 이관하는 한편, 경비과 업무에 전비태세훈련의 지도감독 업무를 추가하였다.

한편, 해양경찰대의 상급기관인 내무부 치안국은 1974년 8월 15일 영부인 육영사 여사 피격사건을

계기로 그해 12월 31일 ‘치안본부’로 개편되어 새롭게 재구성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재발족하여 치안본부장을 차관급(치안총감)으로 승격시키고, 각 지방에는 지방경찰국을 두어 각 지방 경찰국장도 치안감으로 격상하는 등 경찰조직을 전반적으로 확대·강화하였다.

새로운 도전 ‘인천청사시대’의 개막

해양경찰대는 창설 이후 부산에 본대를 부고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 해양경찰대의 운영체제가 본대 중심 체제에서 지구해양경찰대 중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해양경찰대 본대가 수도권이 아닌 부산에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앙정부 또는 내무부 치안본부와 행정적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현안을 통합·조정하여 지휘하기 위해서 본대 청사를 중앙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향후, 정부는 본대 청사를 인천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1977년 8월 10일 기공식에 이어 1979년 10월 4일 신축청사의 준공식을 가진 후 10월 12일 인천으로 이전함으로써 해양경찰대는 26년간의 부산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인천청사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

인천청사로 본대를 이전한 이후 지구대 조직을 정비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구대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1980년 1월 13일 강원도 명주군 묵호읍이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하여 동해시로 승격함에 따라 묵호지구해양경찰대를 ‘동해지구해양경찰대’로 개칭하였다.

1982년 5월 1일에는 해상경비 강화 취지에서 기존에 국가나 지방 관청에서 운영하던 관공선에 대

한 평상시 작전통제권이 해당지역 지구대로 이관되어 각 지구대장이 관공선 통제소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1982년 5월 3일에는 경남 충무시에 ‘충무지구해양경찰대’를 신설하였다.

한편, 1983년 6월 4일에는 출동함정에 기상예보를 조기 전달하여 기상변화에 대한 사전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본대 상황실에 ‘기상예보실’을 신설하였고, 해상의 함정들은 함정 자체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해상경비 및 어로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해양경찰대 인천 청사(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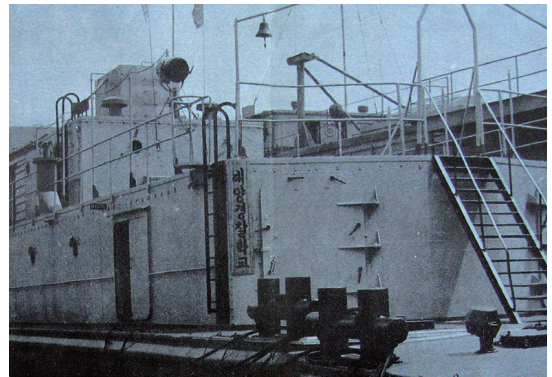
해양경찰 전문요원 양성을 통한 전력 강화

해양경찰대는 해양경찰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71년 7월 14일 해양경찰교육대를 발족하였다. 교육대에서는 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보수교육, 신규 채용하는 순경들의 직무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863정 피격사건을 계기로 해양경찰대에 대한 군특명검열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이 강인한 해양경찰 대원을 양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곧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해양경찰대 100일 훈련’으로 이어졌고, 교육대 내에 훈련단을 신설하게 되었다.

하지만, 1977년 해양경찰 전력화 계획이 수립될

무렵 실시한 군특명검열 결과에서도 여전히 해양경찰대의 교육훈련체계가 매우 미흡한 수준임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1978년 1월 1일부터 해군위탁교육이 시작되었고, 1978년 7월 20일에는 해군교육단 종합기술학교 부지 내 ‘해양경찰대 교육대’가 설치되었다.



▶ 해양경찰교육대(1971)

해양오염방지법 제정 및 해양오염관리관실 신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는 물론, 선박과 각종 해양시설에서 유출되는 기름 등으로 해양환경이 파괴되는 해양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정부는 보다 체계적으로 이에 대처하고자 1977년 12월 31일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는 해양경찰대가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여 해양경찰대의 임무가 해양환경 영역으로까지 공식적으로 확대되었다.

해양환경보전 임무를 맡게 된 해양경찰대는 1978년 8월 9일 직제 개정에서 ‘해양오염관리관실’을 신설하여 해양오염예방 및 방제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1984~1995년

Ⅲ. 해양경찰의 자주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다

해양경찰청 시대 개막을 위한 지지기반 마련

정부는 1980년대 급증하는 해양치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대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1986년 1월 11일 동해, 군산, 포항, 충무 지구대장의 직급이 정정에서 총경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1월 28일에는 해양경찰대장의 직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되었다.

1985년 10월 1일에는 육상경찰이 담당해 오던 선박출입항 통제업무를 해양경찰대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이는 선박의 출입항 통제와 해상조업 통제에 관한 업무관장기능을 일원화하여 선박 출입항 관리업무를 효율화하는 한편, 해양경찰대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6년부터 1989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전국의 371개 어선통제소와 출입항신고소를 인수하였고 선박의 출입항과 해상조업에 관한 사항을 해난구조 및 해양환경보존 업무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해양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안흥지구대 발대식(1988. 12. 20)

1988년 12월 20일에는 해양경찰대의 11번째 지구대인 안흥지구해양경찰대를 신설하여 현장의 치안조직을 보강하였다.

안흥지구대 신설 이후 해양경찰대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89년 9월 26일 본대와 각 지구대의 계 단위 조직에 대한 업무조정을 실시하였다.

1990년 7월 19일 먼저, 해양오염관리관을 '해양오염관리부'로 개칭하였고, 경비부의 정보수사과를 수사과와 정보과로 분과하여 전문화하였으며, '해난구조대'를 신설하여 구조, 특수구조, 국제협력, 항공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다.

관리부 산하에는 경비함정의 정비, 장비기술교육 등 정비·수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비창'을 신설하였다.

정비창은 해양경찰대 창설 당시 정비참모 산하의 함정계 영선반으로 출발하여 1975년 5월 30일에는 정비보급과 소속의 수리소로, 1984년에는 수리창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해양경찰 직제를 대폭 개편하면서 그 기능과 규모를 확대하여 정비창으로 재출범하였다.

함정정비의 급격한 증가에 맞춰 1994년 5월 12일 부산시 사하구에 새 정비창을 준공하여 이전하였고, 8월 13일 준공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986년 5월 1일에는 여성에게도 해양경찰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박경순, 조숙영 등 2명을 해양경찰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순경으로 임용하였다.

1987년 9월에는 해상에서 활동하는 해양경찰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경찰종합학교에 해양경찰학과를 신설하여, 그동안 진행해 오던 해군위탁교육을 경찰자체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994년에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해양경찰 간부를 육성하기 위해 한국해양대학교와 협조하여 해양경찰학과를 신설하였고, 교육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 간부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최초의 여순경 임명식(1986. 5. 1)

새로운 해양경찰문화의 구축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상치안을 확립하며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등 해양전문기관으로서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 해양경찰대는 해양경찰대원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경찰대훈’과 ‘해양경찰대가’를 제정하였다.

해양경찰대훈은 1985년 5월 13일 해양경찰대원들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유가치로 제정·공포되었으며, 이는 해양경찰대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

이 될 통일된 가치관을 상징하는 것으로, “군센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조국수호에 신명을 다하는 역사적인 해양경찰이 되자”로 설정되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대는 대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일체감을 고양하기 위해 ‘해양경찰대가’도 함께 제정하였는데, 밝고 역동적인 음률이 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해양경찰의 역동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였다.



▶ 해양경찰대훈(1985. 5. 13)

해양경찰 악대·의장대 창설 및 충훈탑 건립

1986년 10월 10일 해양경찰대는 34인조로 구성된 악대와 33인조로 구성된 의장대를 창설하여 각종 의전행사 등에 활용하였다.

창설 이후 악대와 의장대는 각종 의전행사 및 기념행사에서 해양경찰대의 위용을 과시하고 행사의 가치를 높이는 지원활동을 수행하였다.

한편, 그해 연말 12월 30일에는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치안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대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충훈탑’을 건립하였다.



▶ 충훈탑 제막식(1987. 5. 26)

해양경찰청 체제의 출범

해양경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던 1991년 5월 31일, 정부는 법률 제4369호 「경찰법」을 제정하였다.

새로 제정된 경찰법은 기존의 내무부 치안본부를 폐지하고 내무부장관 소속 외청으로 경찰청을 독립하였으며, 지방경찰국은 지방경찰청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경찰법은 경찰청장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청 산하에는 해양경찰서를 둔다고 규정하였다. 기존 내무부장관 소속의 해양경찰대는 경찰청장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지구해양경찰대는 해양경찰서로, 지대는 해양경찰지서로 승격되었고, 이때 안흥지구해양경찰대는 태안해양경찰서로 개칭되었다.

해양경찰청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본청의 기구조직은 4부 11과 33계 1장 1담당관 체제로 개편되었고 현장조직은 5과 16계 1실 1단을 기본구성으로 하는 11개 해양경찰서와 368개의 선박출입항신고기관, 1개의 해양검문소, 6개의 지서, 그리고 159척의 함정으로 구성되었다.

1992년 10월 17일에는 다시 직제를 개정하여 울산해양경찰서를 신설하였고, 10월 19일 경남 울산시 일반부두에서 개서식을 갖고 경남 북부지역의 해상치안과 어민들의 안전조업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로써 해양경찰서는 기존의 부산, 인천, 속초, 동해, 태안, 군산, 목포, 여수, 포항, 충무, 제주를 포함하여 12개로 늘어났다.

다만, 충무해양경찰서는 1995년 1월 27일 직제 개정에서 '통영해양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2년 12월 2일 해양경찰청은 '독도 입도 승인 업무 관장사무 조정'에 따라 그동안 경찰청에서 관장하던 독도 입도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담당하게 되었고, 1994년 1월 1일부터는 「유선 및 도선사업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각 시·도에서 담당하던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를 인수하여 담당하였다.

민생치안 중심으로의 임무전환

해양경찰의 전력이 강화된 이후 북한의 공작선 침투와 남북 접점해역에서의 무차별적인 도발이 크게 줄어 들었고, 불법조업을 일삼던 일본어선들도 그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각종 해양사고와 환경오염사고, 해상에서의 각종 범죄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양경찰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더욱 늘어났다.

결국 해양주권선 경비와 불법어로 외국어선 단속을 주임무로 출범한 해양경찰은 1980년대 들어 민생 치안 분야로 업무비중을 대폭 넓혀나갔다.

1993년 여수 금동호 해양오염사고와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민생업무에 대한 해양경찰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자, 그동안 대간첩작전 위주로 운용하던 경비함정을 해난구조, 해양오염 방제, 해상범죄 단속 등 민생치안 위주로 운용하면서 민생치안을 해양경찰 임무의 최우선순위로 상정하였다.



▶ 여수 '금동호' 해양오염사고(1993. 9. 2)

해상범죄 단속과 치안질서 확립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급기야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이 같은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자 해양경찰은 수사정보 기능을 확대하고 경찰력을 집중하는 한편 다양한 특별수사조직을 가동하여 급증하는 해상범죄에 대응하였다.

먼저, 1990년 10월 30일 356명의 인력과 28척의 경비정으로 구성된 ‘해상형사기동대’ 발대식을 갖고 범죄근절을 위하여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시작하였다.

1991년 9월 28일에는 선상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상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370개 어선신고소에 ‘선상폭력신고소’를 설치하였고, 전국 11개 해양경찰서에 선원의 실종·변사 사건을 맡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상범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며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수시로 해상 일제 검문검색을 벌이거나 각 사안별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994년에 이르러서는 총 5755건의 해상범죄 가운데 5568건을 검거하여 96.7%의 높은 검거율을 보일 만큼 범죄단속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 해상형사기동대 발대식(1990. 10. 30)

해난구조체제 강화 및 구조장비의 보강

1980년 후반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0%가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고, 10만 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부터 연안을 항해하는 소형 선박에 이르기까지 약 9만여 척의 선박이 해상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처럼 많은 선박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운항함에 따라 악천후에 의한 전복사고, 선박 간의 충돌 등의 해양사고가 수시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인명 손실 및 재산피해가 대형화되었고 기름 유출에 의해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때문에 해양경찰은 국가 해난구조체제 확립에 많은 공을 들였다. 1988년 5월 1500톤급 경비구난 전용함을 건조 도입한 이후 1994년에는 고성능의 3000톤급 대형 최신에 구난함을 취역시키는가 하면, 구난헬기와 예인선 등 각종 구난장비를 집중적으로 확충하며 해난구조역량을 강화해 왔다.

1991년 6월 28일에는 악천후의 사고나 화재, 폭발, 전복 등 위험성이 높은 사고 발생 시 구조를 전담하기 위하여 잠수요원 29명으로 구성된 ‘특수해난구조단’을 발대하였다.



▶ 특수해난구조대 발대식(1991. 6. 28)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실종자 수색활동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경에 전북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항을 출항하여 격포항으로 향해 중이던 여객선 서해훼리호(110톤, 정원221명)가 위도 동쪽 해상에서 전복 침몰하여 292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경찰청은 구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해군과 공군, 민간 어업종사자들과 합동수색 체계로 광범위한 수색 및 구조작업을 전개하여 108구의 사체를 인양하였다.

특히 해양경찰특수구조단 21명은 해군의 해난구조대원들과 함께 침몰선 내에서 사체 124구를 인양하고 선체 인양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해양경찰·해군 구조단의 활약은 대형 해양사고로 인해 악화된 국민여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고, 정부로 하여금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수난구호체계를 재정립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서해훼리호 인양 후 선체 수색(1993. 10)

수난구호법 개정 및 SAR 협약 발효

* SAR(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협약 :

「해상에 있어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불리며, 해난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하든 조난한 인명의 구조작업이 SAR에 가입한 기관 상호간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1994년 「수난구호법」이 개정되면서 해양경찰청의 해난구조활동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 구조, 구난과 구조된 사람, 선박 및 물건의 보호, 관리, 사후 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수난구호법」은 수난에 처한 사람과 선박의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94년 12월 22일 범국가적인 차원의 수난구호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SAR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이 개정되었고, 1995년 6월 24일 그 시행령도 개정되었다. 여기에는 ‘해상에서의 수난구호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행하고, 하천에서의 수난구호는 관할 소방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해양사고에 대한 구호활동의 책임기관을 해양경찰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10월 31일 각종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사고 시 인명구조와 수색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청에는 중앙구조조정본부, 5개 해양경찰서에 구조조정본부가 발족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효과적인 해난구조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UN 산하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SAR협약’에 가입하고자 하였다.

SAR협약은 통상 「해상에 있어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불리며, 해난사고가 어디에서 발

생하든 조난한 인명의 구조작업이 SAR에 가입한 기관 또는 SAR 기관 상호간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95년 10월 4일 국내에서도 SAR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담당해야 할 책임구조해역은 최대 200해리까지 확대되었고, 국적에 관계없이 조난 선박에 대해서는 수색 및 구조를 실시하고, 필요시 타국의 해역에도 진입하여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급증하는 해양오염사고와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1980년대 들어 바다에서의 해양오염 문제는 날로 심각해졌다. 정부는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수산청, 해운항만청 등 해양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였고, 1977년 12월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수차례 이 법을 개정하면서 해양오염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1984년 7월 3일 정부는 해양오염사고 후 방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73/78 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eto)에 가입하고, 이 협약에서 정한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1986년 7월 23일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해양오염물질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기름의 범위를 원유, 중유, 윤활유 등 중질유로 국한하던 것을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경질유까지 추가하여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선박으로부터의 기름배출 규제를 강화하였다. 1991년 3월 8일에도 「해양오염방지법」을 추가로 개정하여 유해 액체물질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이를 운반하는 선박에는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프린스호 대형 해양오염사고와 같은 해양오염사고가 빈발하는 데다 연안해역의 적조현상 등으로 해양오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를 위하여 1995년 12월 29일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해양오염 방제업무의 책임기관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였다.

이는 수산청, 해운항만청 및 각 시·도에 분담되어 있던 방제기능을 해양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해양환경을 관리하고자 한 것이다.

해양오염 관리조직의 지속적 보강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역할이 증대되는데 맞춰 해양경찰은 주어진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완수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해양오염관리 기능을 해양경찰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민생업무로 상정하고 조직의 역량을 해양환경보전활동에 집중하였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지원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1990년 7월 해양오염관리관을 '해양오염관리부'로 확대개편하고 산하조직을 감시과, 방제과, 시험연구과 등 과제제로 편제하여 조직역량을 크게 보강하였다.

1991년 해양경찰청 체제로 전환된 이후 7월 21일에는 해양경찰서 산하의 해상공해과를 해양오염관리과로 변경하고, 부산, 인천, 충무, 여수 등 4개 해양경찰서의 해양오염관리과 산하에 계 단위의 '해양오염기동방제단'을 신설하여 해양오염 방제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 좌초된 '시프린스호'(1995. 7. 23)

1996~2004년

Ⅳ. 해양영토 지키는 독립 외청으로 발전하다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관할해역의 광대역화

1990년대 들어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해양경찰의 활동영역인 해상에서의 치안환경도 급격히 변화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UN 해양법협약'이었다. UN해양법협약은 제3차 UN 해양법회의에 따라 1982년 12월 10일 채택되고 1994년 11월 16일 발효된 이른바 '바다의 헌장'으로, 바다의 이용에 관한 평시 국제법을 집대성한 국제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6년 2월 28일자로 UN해양법협약을 정식으로 발효하였는데 UN해양법협약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 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나포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1970년대부터 세계 각국이 앞을 다투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고, 이러한 경향이 확산되자 1982년 5월 UN 해양법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해양법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 UN해양법 관련 보도(1994. 11. 16, 매일경제)

각국이 본격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사실상 '신 해양주권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우리나라도 1995년 12월 국회의 비준을 얻어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동해·서해·동중국해 수역의 폭이 좁아 연안국이 200해리를 획정할 경우 인접국인 일본 및 중국의 영해는 물론 육지까지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각국 상호간 어업협정 체결을 서두르게 되었다.

우리 정부도 우리 해역에서 자행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본·중국과 어업협정 협상에 들어갔다.

일본과는 1998년 10월 9일 기존의 한·일 어업협정을 개정하여 1999년 1월 22일 '신 한·일 어업협

정'을 발효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중국과도 2001년 4월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6월 30일부터 발효하였다.

중앙행정기관으로의 승격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해양경찰이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 관할해야 할 해역의 범위가 어업자원보호선 내측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대됨으로써 기존보다 약 5.2배 넓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도 21세기 해양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16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해양행정체제를 일원화하여 해양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1996년 8월 8일 제 5153호로 「정부조직법」(법률 제5153호)을 개정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소속의 외청으로 독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1953년 창설 이후 43년 만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8월 8일 외청 독립과 동시에 해양경찰청 개청 및 현판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대내외에 선언하였고, 8월 13일에는 초대 해양경찰청장으로 조성빈 치안정감이 취임하였다.



▶ 조성빈 초대 해양경찰청장 취임식(1996. 8. 14)

독립 외청으로 승격한 해양경찰청은 달라진 위상에 걸맞도록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기존의 부에서 국체제로 전환하였고, 기동방제관·감사담당관·해상안전과·외사과를 신설하는 등 기존의 4부 1담당관 11과로 구성되어 있던 기구조직을 4국 1관 3담당관 13과로 확대 개편하였고, 동시에 해양경찰서는 6~8과 17계 1실 체제로, 정비창은 7과 1단 8계 체제로 확대 개편하였다.

업무영역의 확장 및 차장제 신설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한 이후 관할해역이 광역화한 것은 물론, 수상레저, 교통문자방송 등이 신설되고 선박 입·출항 업무 등을 인수하면서 업무영역이 크게 확장되었다.

1997년 5월 6일에는 오염관리국 감시과에 폐기물 배출해역 승인업무를, 해양경찰서 오염관리과에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 업무를 추가하였고, 7월에는 경비구난과에 해상 대테러 및 경호업무를 신설하였다. 이어 1999년 1월에는 부산, 인천, 동해, 목포, 제주, 군산 등 6개 해양경찰서에 '특수기동대'를 창설하였다.

특히 1996년 5월 24일 직제 개정 시 청장의 업무대행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차장'제가 신설되었다. 한편,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어 오던 출입항 신고기관도 1996년 8월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였다.

2002년 7월 8일에는 직제 개정을 통해 '완도해양경찰서'가 신설되었고, 7월 12일 개서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날의 직제 개정에서는 해양경찰지서의 명칭을 '파출소'로 변경하고 출장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만들어져 이때부터 모든 해양경찰지서는 파출소로 변경되었다.

인력의 자원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해양경찰청은 경찰관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적으로 형성하여 주어진 책무를 보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인재육성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한동안 해양경찰관 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경찰종합학교 해양경찰학과였다.

신입순경 교육, 경위·경사에 대한 기본교육 등 연간 4개 과정에서 2,000여명을 교육하여 해양경찰관의 직무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UN해양법 발효 이후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직무교육장’을 마련하였다.

직무교육장에는 강의실과 전산실, 숙소 등을 구비하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해상경비, 수상레저관리, 해양오염방제 등 14~18개의 해양경찰 전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매년 500~900명을 교육하였는데 이는 해양경찰관의 해상치안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었다.



▶ 해양경찰청 직무교육장 설치(1997. 3. 29)

한편, 체계적인 함정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10일에는 「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여 교육과에 ‘훈련단’을 신설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함정훈련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해양경찰학과와 직무교육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훈련체계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은 끊임없이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고, 2003년 12월 23일 해양경찰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급진전되었다.

대통령 언급 이후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공포하고, 2월 5일에는 초대 해양경찰학교장으로 최광현 치안감을 발령하는 한편, 2월 16일에는 해양경찰청 내에 해양경찰 학교 신설 준비단을 발족하였다.

그해 5월 6일 인천시 중구 운북동(영종도) 정부기관단지 내 해양경찰학교를 개교하였고, 연간 3000여 명의 교육생을 수용하여 경찰관 직무과정, 전투경찰순경 기본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수 해양전문인력 양성의 산실로 자리 잡게 되었다.



▶ 해양경찰학교 개교(2004. 5. 6)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활동 강화

1996년 이후 UN해양법협약의 발효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이 선포되고, 이어서 한·일,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되는 등 국제해양질서가 크게 변화하였다. 해양경찰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확대된 우리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하였다.

먼저, 전 해역을 66개 경비구역으로 구분하여 경비함정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우리 어선의 월선 및 피랍방지를 목적으로 설정한 동·서해특정해역을 비롯한 광역해역에 일일 15~20척, 영해 및 접속수역에 10여 척, 해양경찰 책임항만을 비롯한 연안구역에 30여 척의 경비함정을 3선 개념으로 배치하여 체계적인 경비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일일 40여 척의 형사기동정, 순찰정, 방제정 등 특수함정을 투입하여 취약해역에 대한 순찰 경비도 강화하였다.

해양경찰은 경비함정을 증강하는 것은 물론 광역초계용 비행기 1대를 김포에 위치한 인천해양경찰서 항공단에, 구조·구난용 헬기를 인천·부산·목포·동해·제주해양경찰서에 각각 1~2대씩 배치하여 날로 증가하는 해상치안 수요에 대비하였고 비행기는 주2~3회, 헬기는 일일 2~3대가 출동하여 함정과 연계한 입체적인 경비작전으로 해상범죄 단속 및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 해양오염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이어서 동해와 서해에 각각 '특정해역'을 설정하여 두고 있다. 특정해역이란 남·북 간 접경해역의 어로한계선 이남 해역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어선에 한해 조업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해역을 말한다.

일반해역에서 어민들의 안전조업을 위한 어로보호 업무는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

여 수행하지만, 동·서해의 남·북 간 접경해역에서의 어로보호는 그 특성상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협조하여 수행하였다.

어업인들이 자칫 월선조업을 시도하다 피랍되는 사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해역에서의 어로보호를 위하여 동해에 3척, 서해에 4척의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여 운용하였다.

독도와 주변해역에는 5000톤급 경비함정인 5001함을 비롯하여 500톤급 이상 중·대형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초계비행기와 헬기를 이용한 항공순찰도 실시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매년 10회 이상에 걸쳐 독도경비대의 교대경력 및 보급품의 수송도 적극 지원하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 어로보호 중인 해양경찰

테러위협으로부터의 안전 확보

국제사회에서의 테러가 날로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테러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였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테러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1998년 10월 1일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대통령 훈령 제47호)에 따라, 해상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타격하기 위하여 그동안 인명구조활동

위주로 운영돼 왔던 40명 규모의 특수구조단을 67명 규모의 '해상특수기동대'로 확대 개편하였고,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와 해양사고 시 인명 구조 임무뿐만 아니라, 총기·폭발물 사건 등 해상 특수범죄의 진압 및 인질 구출, 해상테러사건 예방 및 진압 등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2002년 1월 9일에는 한·일 월드컵과 부산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해상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특수기동대를 새롭게 재편하고 본청 소속의 '해양경찰특공대'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본청에는 해양경찰특공대가, 각 해양경찰서에서는 특수기동대가 운영되었다.



▶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해양경찰특공대(2004. 3. 26)

구난구조와 해상안전 업무의 확대

1995년 9월 4일 가입한 「국제수색구조협약」과 이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수난구조법」에 따라, 해상에서의 수난 및 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난구조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 구조조정본부를, 그리고 8개 해양경찰서에 구조지부를 설치하였다.

2010년 10월 23일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공항이 입주해 있는 영종도 주변 해상에서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활동과 기체 탐색, 해상에서 대테러 방지 등의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해양

경찰 특수구조단'을 창단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서해훼리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1996년 10월 9일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여객선 운항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이관받아 여객선 안전 운항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1년 12월 13일부터는 경찰청의 여객선 점검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어 기존의 안전관리업무와 병행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연안해역에서의 선박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 해양경찰 특수구조단 헌판식(2001. 10. 23)

이와 더불어 1999년 2월 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2000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수상레저업무도 맡게 되었다. 이 법은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을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조종면허를 받도록 하고,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매년 7월 전국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 수상레저활동 집중지역에 순찰정, 경비정 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더불어 2001년부터 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4년까지 419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을 적발하였다.



▶ 해수욕장 안전순찰 활동

해양범죄의 증가 및 단속활동

1995년 6706건, 1996년 7015건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던 해양범죄가 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는 무려 2만 4680건, 1998년에는 3만 6335건으로 급증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해상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계절별·시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상습·고질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해양경찰서별로 치안수요 및 범죄발생 빈도를 분석하여 최악 해역 58개소와 우범항·포구 107개소를 지정하고 '형사활동 책임지역제'를 시행하여 단속 회피선박 및 항·포구 주변의 오페수 배출사범을 최대한 단속하는 한편, 인접국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밀수 등 국제성 범죄 단속에도 경찰력을 집중하였다.

특히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강·절도, 폭력, 약취 유인 등 민생침해 강력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폭력전담반 13개반 28명, 강·절도 전담반 13개반 31명, 마약전담반 15개반 33명 등 각 범죄유형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형사계, 상황실, 파출소·출장소에 24시간 피해신고 접수처를 운영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형사기동정 및 경비함정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즉응태세를 강화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마약 밀반입 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마약사범 검거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마약계를 신설하였고, 전국 13개 해양경찰서에 마약전담반을 지정하여 정보수집 및 검거에 주력하였다.

불법조업 단속 강화

해양경찰의 관할구역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일본어선의 수는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중국어선은 한·중 어업협정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중국어선들이 선단을 이뤄 대규모로 몰려다니면서 어족자원을 싹쓸이 할 뿐만 아니라, 각종 흉기를 소지하여 우리어선을 위협하거나 해양경찰의 단속에 대해서도 극렬히 저항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상상황별 검문검색지침을 보강하고 해상 진압·단속장비를 보강하여 배치하였으며 함정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흉폭화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였다.



▶ 해양경찰에 검거된 중국어선

국제교류 및 협력의 증진

해양경찰청은 주변국과의 독자적인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선 러시아, 중국, 일본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하였다. 1998년 9월 11일 러시아 국경수비부와 최초로 교류협력약정(MOU)을 체결한 이후 1998년 12월 8일 중국공안부 변방관리국, 1999년 4월 29일 일본 해상보안청과도 약정을 체결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해적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말라카 해협 등에서 우리 어선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와 해상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2001년 9월 26일 말레이시아 해양경찰에 이어 2003년 11월 28일 필리핀 코스트가드, 2004년 8월 31일 싱가포르 코스트가드와 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0년 12월에는 해상범죄, 보안, 어로보호, 밀수·밀입국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북태평양해상치안기관장 회의(North Pacific Coast Guard Forum)가 결성되었고 이후 캐나다(2002. 7) 및 중국(2004. 10)이 가입하였다.

회의는 회원국 간 순번제로 개최국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1회 아시아해상치안기관장 회의(2004. 6. 17)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기본계획 수립

해양오염사고는 1995년 299건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1998년에는 479건, 2000년대는 483건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이처럼 증가하는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취하기 위한 대비·대응태세를 강화하였다.

1997년 7월부터 ‘해양환경모범선박(GREEN SHIP)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오염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박을 인증하는 한편, 1998년 4월에는 ‘명예해양오염감시원 제도’를 부활하여 운영하는 등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다각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였다.

또 2002년 9월에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기물 해양배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외청 독립을 계기로 확대 개편된 해양오염관리국을 중심으로 본청에는 감시과·방제과·분석과를 두고, 각 해양경찰서에는 감시계·방제계·기동방제단으로 구성된 해양오염관리과를 두어 해양환경보전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다. 동시에 해양경찰서의 해양오염 감시 인력을 초창기 36명에서 92명으로 증원하는 등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연간 7,000~8,000여 건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해양경찰 기동방제팀 창단식(2004. 4. 9)

1989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Exxon Valdez호 사고 이후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공동 대응 등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협약)’이 체결되고 1995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리 나라도 1997년 11월 OPRC 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2000년 2월 9일 국내에서도 협약이 발효하였다.

협약가입국은 기름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계획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0년 1월 17일 ‘국가방제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국가방제기본계획은 정부차원의 방제조직 및 지휘체계,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 및 협조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역별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고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해양경찰서의 지역방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들을 근간으로 해양오염 사고에 대응하는 방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폐기물 관리 업무의 시작

해양경찰청은 1996년 8월 신설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동하면서 환경부에서 수행하던 해양배출 폐기물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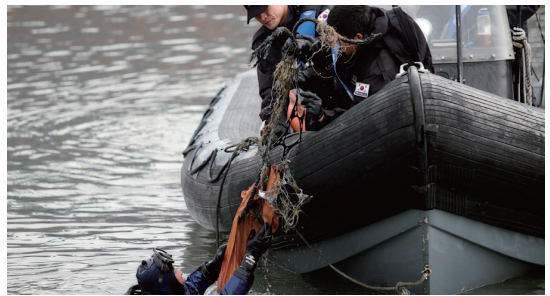
해양폐기물 정책부분은 해양수산부가 맡되 집행 업무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게 되어, 해양오염관리국 감시과에서 해양폐기물 배출해역 승인업무를, 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에서 해양폐기물 위탁자의 신고 및 변경업무를 관장하였다.

1998년 초기 해양배출 물질은 대부분 분뇨였으나 1993년 하수처리오니의 해양배출이 시작되고 1997년 축산폐수에 이어 2004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 해양배출 허용 등으로 폐기물 해양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해양배출 폐기물이 급증하자 정부는 2001년 9월 12일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를 신설하여 해양배출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해양경찰청은 불법 배출행위를 감시 단속하기 위하여 폐기물 운반선 점검을 강화하고 항공기 및 경비함정을 이용한 추적감시를 확대하는 등 불법 폐기물로 인해 해양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 해양폐기물 수거 작업 중인 해양경찰

2005~2013년

V. 진정한 해양주권의 수호자로 도약하다

차관급 조직 승격과 청사 송도 이전

1996년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계기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양관리정책을 강화하였고, 해양관리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였는데 2005년 들어 해양 경찰의 위상은 한층 강화되었다.

2005년 7월 22일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됨으로써 마침내 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이 차관급인 치안총감으로 격상되고, 해양경찰청은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되었다.

해양경찰청이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됨으로써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국내 치안·재난안전 관리 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바다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고, 나아가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의 해상치안기관장들과도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원활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책홍보관리관 및 국제협력관, 광역수사단 등을 신설하고 인력도 대거 증원하면서 해양경찰청 조직체제도 크게 변화하였다. 그 결과 2005년 말 해양경찰청의 정원은 경찰 5,803명, 전경 3,592명, 일반직 250명, 기능직 361명, 계약직 1명 등 총 1만 34명으로 늘어나, 창설 이래 최초로 전체 정원이 1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2005년 12월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송도청사시대’를 개막하였다. 12월 23일 제5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

하여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과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겸한 신청사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 해양경찰청 송도 신청사(2005. 12. 1)

지방해양경찰청 신설

2006년 들어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치안상황담당관을 신설하였고, 4월에는 해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상호 대등한 교류협력을 위하여 인천·목포·부산·동해 등 4개 지역에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신설하였다.

2006년 12월 1일에는 6월에 발생한 일본의 도쿄 수로측량사건을 계기로 광역해상경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동해·목포·부산지역본부를 동·서·남해 해역을 담당하는 3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개편하고, 1개의 직할서 ‘인천해양경찰서’를 두었다.

이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속초·동해·포항·울산해양경찰서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완도·목포·울산 해양경찰서를, 그리고 남해지방해양

경찰청은 부산·여수·통영·제주해양경찰서를 소속 기관으로 관장하였다.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개청식(2006. 12. 4)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처 통폐합 등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신설되는 국토해양부로 통합되면서 해양경찰청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해양경찰청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사고 처리와 향상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 8월 7일 ‘서귀포해양경찰서’를, 2011년 4월 1일에는 ‘평택해양경찰서’를 신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2년 6월 1일에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개청하여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가 소속기관으로 조정되었다.

추가적으로 2012년 12월에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창원해양경찰서’를 신설하여 전국 지방해양경찰청은 4개, 해양경찰서는 16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해양경찰학교 교육체계 내실화 및 훈련함 건조

해양경찰학교는 차관급 외청에 걸맞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지향적인 해양경찰학교 설립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6년 2월 23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영종도)에 제2캠퍼스를 개관하였고, 2007년 12월 28일에는 충남 천안 동남구에 새 캠퍼스

를 마련하여 이전하였다.

2012년 해양경찰학교에 함정훈련학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현장위주의 실습교육을 총괄하도록 하였고 2013년 11월 전남여수에 최신시설을 갖춘 ‘해양경찰교육원’을 개원하여 해양경찰학교를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발전기획단’을 운영하여 해양경찰교육원의 미션·비전 전략체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전문교육시설에 적합한 교육과정, 인력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신입경찰관 교육 등을 위해서 해양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12년 4200톤급 훈련함을 건조하여 해양경찰학교에 배치하였고, 함정명칭을 ‘훈련함 바다로’로 선정하여 7월 3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취역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훈련함 바다로는 체계적인 실무중심 실습과 훈련을 통한 전문 해양경찰 육성을 목표로 함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및 상황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장비 운용술 습득 등 표준화·구체화된 ‘실습교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첫 훈련함 ‘바다로’ 취역식(2012. 7. 3)

첨단 기술역량과 통신인프라 구축

해양경찰청은 21세기 새로운 해양국가시대를 맞아 해양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22일 ‘연구개발(KCG R&D Center)’을 설립하여 우수한 연구인력과 첨단장비를 확보하면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였다.

2007년 3월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정식 직제화되었고,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고 과학적인 분석·감식기법으로 과학수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2010년 ‘해양경찰연구소’로 승격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본청에 최첨단 시설의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갖춘 ‘해상치안종합상황실’을 구축하였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선박 위치, 이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판단·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상황시스템으로 해양수산부의 선박위치추적시스템과 해군의 전술지휘자료체계 등 내·외부 해양안전정보와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양경찰은 해상치안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광역 해역에 있는 경비함정과 원활하게 통신하고 제반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통신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5년부터 ‘광역위성 지휘통신망(KOSNET)’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 말 경비함정 72척에 구축 완료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원해 경비 시 발생하던 통신망 소통 장애를 개선하여, 통신거리를 한반도 전 해역으로 확장하고 위성을 통한 인터넷

및 영상전화 등으로 해상치안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조난 및 재난상황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해양경찰청 해상치안종합상황실

독도·이어도의 해양주권 수호

해양경찰은 독도 영해 및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확고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5000톤급을 비롯한 대형함정을 배치하여 독도 주변해역 경비를 강화하고, 경계 미회정 수역에서의 우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함정 무장도 보강하였다.

또 실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강릉과 울릉도에 헬기와 광역초계기를 전진 배치하여 철저한 감시활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해군, 독도경비대 등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도 수호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기상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위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수중암초인 이어도는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로서 제주도 부속도서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거리에 있으며 수중암초의 최정상인 해수면으로부터 4.6m 아래에 잠겨 있어 파도가 심할 때에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어도는 예로부터 ‘전설 속 환상의 섬’ 또는 ‘피안의 섬’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구조물을 설치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양·기상·환경정보 등을 관측하는 종합해양과학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UN해양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고 우리의 관할권 범위를 중국 측에 확고하게 인식시킨다는 방침 아래 순찰 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항공 초계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어도를 경비 중인 해양경찰

‘안전한 바다 만들기’로 바다안전망 구축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2007년에는 해양긴급번호 122를 개통하였고 2007년 7월 1일에는 전문적인 해양구조 활동 및 응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해양경찰서에 전문잠수요원 및 응급구조요원으로 구성된 ‘122해양경찰구조대’를 설치하여 연안 해역에서의 사고에 대응하였다.

2012년 2월에는 경찰서 단위 122구조대가 대응하기 힘든 수심 40~80m에 이르는 중수심대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를 확대·개편하여 ‘특수구조팀’을 신설하였다.

특수구조팀은 전국 해역을 관할로 하여 화재선박, 항공, 수상(수중) 인명구조 등 특수구조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서별 122구조대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파출소·출장소 직원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전문훈련 보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해양경찰 구조역량을 강화하며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9년 3월부터는 경찰관 개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이동형 치안방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등 연안 주변의 방송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효율적인 연안 해역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5월에는 해양사고로 인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실시간 영상으로 의사가 환자를 살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해양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함정에 해양원격의료시스템을 설치하였다.

한편, 2012년에는 급변하는 IT흐름에 맞춰 출입항 신고 절차를 기존 방문신고 방식에서 자동화 방식인 V-pass 시스템으로서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 시스템은 전국 연근해 어선에 GPS신호를 이용한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출장소, 경비함정에서 실시간 어선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이동형 치안방송 서비스' 안내 사진

정부는 2007년 12월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연안 해역의 해상교통관제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인수하였고, 2012년 11월에는 여수연안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개국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 여수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개국식(2012. 11. 1)

과학과 인권 본위의 수사체계 정착

해양경찰청은 변화하는 해상치안 환경에 대응하고자 특별법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연중 기획수사 및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였다. 어구·어획물 절도, 선용금 사기 등 유형별 테마를 선정하고 취약해역 및 우범 항·포구별 치안수요를 분석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수사활동을 강화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국민편익 위주의 수사를 미션으로 하는 선진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선진 해양수사 마스터플랜 2008'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2008년 12월 23일에는 '해양과학수사센터'를 개소하여 과학수사계, 증거분석계 등 2계의 하부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현장대응능력 강화, 범죄분석능력 확대 등 두 가지의 목표를 수립하고 21세기를 향한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해양과학수사센터는 실험실 2개소를 갖추

고 유류와 폐기물 감식은 물론 거짓말탐지기, 디지털 증거분석, AFIS 신원확인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지방청 중심의 광역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팀을 정식 직제화하여 출범하였다.



▶ 연구 중인 '해양과학수사센터' 직원들

2012년 12월 11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법집행기관으로 추가되어 해양 관련 금융범죄 수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해상치안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

2000년에 '북태평양해상치안기관회의(NPCGF)'가 결성된 이후 해양경찰청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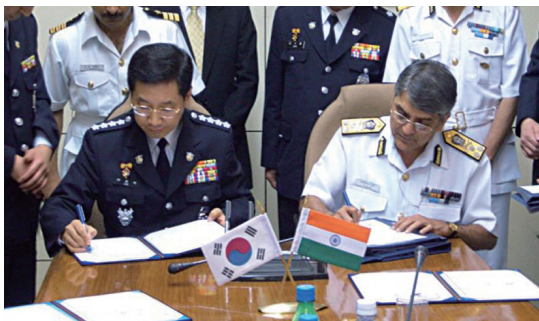
북태평양해상치안기관과의 다자협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 등 아시아권 전체의 해상치안기관과의 국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에 따라 2005년 4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20개국과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IMB-PRC), 해적정보공유센터(ISC)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아시아해상치안기관장 회의'가 결성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양경찰청은 세계 각 국 해상치안기관들과의 협력약정 체결대상을 더욱 확대

하였다.

이미 교류협약약정을 체결한 말레이시아(2001년), 필리핀(2003년), 인도네시아(2003년) 등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인도 코스트가드와 2007년에는 베트남 해양경찰과도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글로벌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08년 캐나다 코스트가드와 2010년에는 아르헨티나 해양경찰과도 교류협력약정을 2012년에는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과 같은 해적에 의한 피해방지 및 협력을 위하여 케냐 해경청과 2012년 호주 해사안전청 및 뉴질랜드 해양청과도 교류 협력을 체결하였다.



▶ 인도 코스트 가드와 교류협력 약정(2006. 3. 13)

주변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서 각국 간의 해상에서의 경비함정 합동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청을 중심으로 주변국의 지방조직과 함정합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연해주사령부와 동해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일본해상보안청 제7관구와 한·일 중간해역에서 함정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우리나라 선박 및 재외동

포 권익보호를 위해 2002년 중국상해총영사관에 경정 주재관 1명을 파견하기 시작한 이래로 주재관 파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남극지역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경찰관을 해상안전요원 자격으로 월동연구대에 포함하여 매년 1~2명씩 파견하고 있다.

선진 방제 시스템 구축

2009년 정부는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시행돼 온 국가방제기본계획을 전면 개정하여 ‘국가긴급방제계획(NCP, National Contingency Plan)’으로 새롭게 정비하였다.

국가방제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 해양오염사고와 2008년 목포 여명7호 및 부산 일해호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대책본부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제대책본부 운영방법을 개선하였다.

동시에 관할 해양경찰서별로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열어 관할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실질적인 시행매뉴얼을 확립하였다.

또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가차원에서 1만kl 이상의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방제물자를 비축하는 체제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국책과제사업으로 총 75억 원을 들여 동·서·남해에 각각 2000m² 내외의 방제비축기지를 건설하기로 하였고, 2009년 광양항 방제비축기지와 대산항 방제비축기지를, 2001년에는 울산방제비축기지를 완공하였다.

방제비축기지가 완공됨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방제대비태세가 크게 강화되었다.



▶ 울산 방제비축기지 준공식(2011. 6. 21)

재난적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를 실행하고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유출유 확산 예측 및 피해 위험평가를 통한 방제우선순위 등의 방제전략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기능의 '해양오염방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2008년 우리나라 13개 전 해역에 대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2011년에는 복잡하고 다변하는 해안선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일사불란한 방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해안방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폐기물 해양배출 제도의 정비

해양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2006년 3월 해양배출 폐기물 감축을 위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2011년까지 2005년 폐기물 해양배출량 993만 m³의 절반인 400만 m³로 감축하였다.

2008년 1월 20일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시행하였으며, 그 해 8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폐기물 해양

배출 처리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2005년 4월 해양배출물 관리과를 신설하였고, 폐기물 운반선에 대한 감시·단속과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환경 전문가, 환경단체 및 폐기물 해양배출업체가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폐기물 해양배출량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창설 60주년 새로운 변화의 모색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해양수산부가 부활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이었던 해양경찰청은 다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시기인 3월 18일에 취임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세계 일류 종합해양집행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기능조직별 실현해야 할 주요 사업과제를 도출하여 '100대 실천과제'를 집대성하는 한편, 2012년 사업계획에도 반영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창설 60주년을 맞아 3월부터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을 시작으로 해양경찰 학술대제전, 대규모 방제훈련 및 주권수호 릴레이훈련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5월에는 조정·카누·요트·트라이애슬론·핀수영 등 해양스포츠 분야의 선수 30명으로 '해양경찰체육단'을 창단하는 동시에, 해양경찰 에피소드 수기 공모전, 바다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대규모 연안정화 활동 등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모행사·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해양경찰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 해양경찰 창설 60주년 기념 '한강여의나루 요트대회'(2013. 6. 15)

Chapter 2

지난 4년간의 기록

4 YEARS

국민안전처 편입 이후 중단되었던 백서를 발간하며
지난 4년간('14~'17) 해양경찰청의 주요사건과 조직의
변천사를 요약해서 담았습니다.



1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5일 인천을 출항하여 제주로 향해하던 로로여객선 세월호(6,825톤, 탑승객 476명)가 2014년 4월 16일 08시 49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빠르게 우선회하면서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고 같은 날 10시 31분경 선수 구상선수만 남긴 채 선체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사고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은 관공선, 어선 등과 합동으로 172명을 구조하였으나 304명의 승객이 사망·실종하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11월 11일까지 210일 동안 수중·해상·해안가 등을 수색하여 총 295명의 희생자를 수습하였다.

이 사고는 해양경찰의 구조·안전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헬기 도착 (4.16 09:26경)



세월호 전복 (4.16 10:31경)

수색·구조 활동 모습



세월호 사고 현장



헬기 항공구조사 구조



해경 123정 구조



구조세력 접근



구명벌 구조



우현 합동 구조



세월호 전복 후 수색활동



야간 수색구조 활동



수중 수색 구조(민간잠수사 입수)

국민안전처 신설,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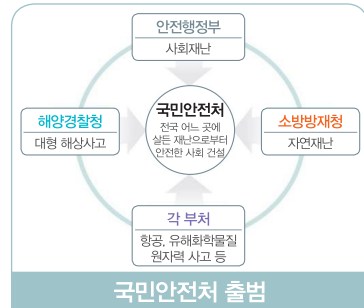
세월호 사고 이후 분산된 재난안전기능을 통합하고 기구 개편 및 기능 이관

1 국민안전처 출범

세월호 사고 이후 각 부처에 분산된 재난안전 기능을 통합하고 육·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안전관리 본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통합



대통령 대국민담화('14.5.19)



국민안전처 출범

2 기구 개편

구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3개 국(局) 단위 기구(기획조정관, 국제협력관, 정보수사국)와 9개 과(課) 단위 기구(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재정담당관, 창조성과담당관, 인사담당관, 형사과, 정보과, 외사과)가 폐지되었고, 해상교통관제과가 신설되면서 과거 '2관 4국 22과' 체제에서 '3국 14과'로 축소되었다.

소속기관의 경우 경기·충청권 해역의 해양경비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現 중부지방해양경찰청)를 신설하고, 전국 단위의 대형·특수 해양사고를 전담하기 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창단하였다.

또한, 본청 직할서였던 인천해양경찰서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로 전환하고, 본청 직속기관이었던 해양경찰연구소를 해양경비안전교육원(現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로 재편함에 따라 기존 '7개 1차 소속기관, 16개 해양경찰서, 1개 직할 해양경찰서'에서 '8개 1차 소속기관, 17개 해양경비안전서'로 재편되었다.

수사 및 정보기능 축소로 서해·남해·동해 3개 지방해양경찰청의 정보수사과 및 인천해양경찰서를 포함한 17개 해양경찰서의 정보과가 폐지되었고, 훈련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소속으로 종합훈련지원단을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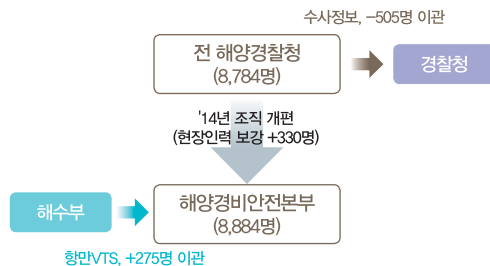
3 기능 이관

해경의 업무를 구조·안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수사·정보 기능 일부와 해당 인력 505명을 경찰청으로 이체 하였으며, 그 동안 해경과 해양수산부가 분리 운영해오던 해상교통 관제업무(VTS)를 해경 사무로 일원화하면서 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사 정원 275명을 해경으로 이체하였다.

4 정원 변동

'14년 조직개편 전 해양경찰청 총 정원은 8,784명이었으나, 수사·정보 인력을 경찰청으로 이체함에 따라 505명이 감축되었고, 해양수산부 소속 항만교통관제사(VTS) 275명 이관 및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 등 현장 구조안전 인력 보강으로 330명이 증원됨에 따라 개편 이후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총 100명이 증원된 8,884명으로 출범하였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현황



1 해양재난 대응역량 강화

'14년 11월 기능별 훈련 집행으로 분산된 훈련효과를 집중하기 위해 교육원 종합 훈련지원단을 신설하고 여객선 안전관리를 해수부로 일원화 하는 한편 '15년 3월에는 체계적인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해상안전 기동점검단을 신설하였다.

'16년 1월에는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육·해상 분산되어 있던 긴급신고번호를 119로 통합하고 '17년 2월 해양에서의 구조·안전임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 안전국을 신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장지휘권 강화 등 수상 구조법을 개정하고 선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수색구조매뉴얼 등 관련 각종 매뉴얼을 새롭게 제·개정하였다.

2 특수·대형사고 전담 구조팀 신설

해양에서 각종 선박의 충돌 등 대형·특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여 특수구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4년 12월 23일 '중앙해양특수 구조단'을 창설하였고, 2015년 11월 30일에는 동·서해 해양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오염사고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중특단 소속으로 긴급방제팀을 신설하였다.



3 교육훈련 강화

민·관·군 합동 인명구조훈련·국민참여형 훈련 등 합동훈련을 대폭 확대하였고, 해상종합 훈련 중목을 구조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인명구조훈련을 강화하였다.

또한, 현장 분야별 교육을 강화하여 현장근무자 역량을 극대화하였다. 수중수색·구조요원 대상 심해잠수 위탁교육(해군 SSU)을 확대하고, 현장 경찰관 대상 구조전문화 과정을 운영하면서, 서장·함정장·안전센터장 등 현장지휘관 대상 상황지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4 인력·장비 등 구조 인프라 확충

사무실 인력을 함정·안전센터 등 현장으로 재배치하여 현장역량을 강화하면서 구조·구급 전문 구조인력을 채용하고 구조대원 자체 양성교육을 통해 심해잠수 등 전문구조인력을 확충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형헬기, 잠수지원정·무인잠수정(ROV), 헬기 투하용 구명벌 등 필수 구조 장비를 보강하였다.



잠수지원정



대형헬기



수중탐색장비(ROV)



헬기투하용 구명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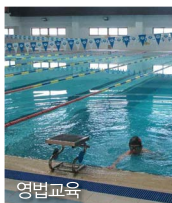
5 수상구조사 도입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 안전관리 강화 및 민간 자격증의 국가자격증 필요에 따라 2015년 7월 24일 수상구조법을 개정하여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기존 민간자격증과 달리 선박·수상레저·해수욕장 등 수상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자격제도로써 시스템구축 및 교육기관 지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5월 27일 제1회 시험을 집행하였다.



사전교육



영법교육



종합구조교육



응급처치 교육

1 예방·구조 중심 안전센터로 전환

기존 치안·선박통제에서 구조·안전 중심의 안전센터(현 파출소)로 재편하여 체력단련과 연안 3대 안전사고 대응 훈련, 단계별 인명구조 교육 등 교육·훈련을 보강하고 구조장비를 보강하면서 현장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신형 연안구조정



안전관리용 드론

2 연안사고 예방법 제정 등 안전관리 강화

2013년 7월 18일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2014년 5월 21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연안사고 예방 계획 수립, 연안 위험구역 지정·관리,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등을 담고 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연안안전의 날(7.18)' 및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을 운영하면서 대국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과 '생존수영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단계별 인명구조 교육 과정



안전시설물 점검



연안안전교실



생존수영교실

3 해상교통관제(VTS) 업무 일원화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편 시 해상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의 항만 해상교통 관제센터(VTS)를 해경본부로 이관하여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로 해상교통관제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관제사 인력을 증원하고 전문교육을 4주에서 10주로 강화하면서 전 항만의 관제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다중이용선박 통항량이 많은 해역(경인·태안)에 연안 VTS를 추가 구축하였다.



제주항만 VTS



여수연안 VTS

4 지자체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2014년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해양경찰청에서 지자체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청은 해상구조대와 안전지원반을 운영하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컨설팅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해수욕장 지도점검



지자체 교육훈련 지원



인명구조 합동훈련



1 기동전단 운영

우리수역 집단침범 조업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형태가 점차 폭력화·집단화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총경급을 전단장으로 대형함정 8척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처음으로 운영하였고, 지금까지 중국어선이 집중되는 성어기 기간에 전국 관할해역을 돌며 불법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차단·퇴거하는 등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무리지는 중국어선



기동전단 운영

2 고속단정 침몰

2016년 10월 7일 13시 10분경 소청도 남서방 40해리 해상에서 집단침범하는 불법 중국어선 40척을 발견하고 3005함과 1002함이 합동으로 나포작전을 실시하던 중 선명미상의 중국어선이 3005함 NO.1 단정을 고의로 충돌하여 단정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향후 해양경비법을 개정하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속단정 침몰상황 재구성

3 해양경비법 개정

2017년 4월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양경비법을 개정하여 공용화기 사용 요건을 추가하고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응

4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

2017년 4월 4일에는 서해 5도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전담을 위해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여 NLL 해역 단속을 강화하였다.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선제적 대응

1 독립 외청으로 재출범

해경본부로 개편되면서 수사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우려했던 해양 치안공백이 현실화되었다. 또한, 중국·일본 등 주변국 해양세력 강화에 맞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해양수상부 독립 외청으로 재출범하였고, 수사·정보 기능이 정상화되고 기획 조정관실, 운영지원과 등 지원부서가 신설되면서 조직이 4국 13과에서 **2관 5국 24과로 확대** 개편하였다.

7월 27일에는 박경민 치안총감이 15대 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하였고, 조직혁신에 박차를 가하였다.

2 조직역량 강화

해양경찰 재출범 직후 조직을 신속히 안정화하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1월까지 '해양경찰 혁신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이와 연계한 중장기 혁신 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무엇보다도 수사·정보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였고, 해양범죄 수사관할을 명확히 하고자 2017년 9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

3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

2017년 9월 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인사 및 해·수상인 약 1,000여 명을 모시고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악대 공연 등 식전행사와 유공자포상 및 주빈 치사 등 공식행사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해상시열과 장비전시 등 다채롭고 역동적인 행사를 통해 우리청의 특징을 외부에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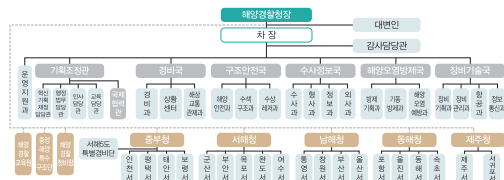
4 울진해양경찰서 신설

2017년 11월 28일에는 동해 해역의 해양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울진해양경찰서를 신설하였고 이로써 총 19개의 해양경찰서를 두게 되었다.



7.27 해양경찰청 제막식

[해양경찰청] 2관 5국 24과



홍상헌

VIP 치사



수치 수여

출항신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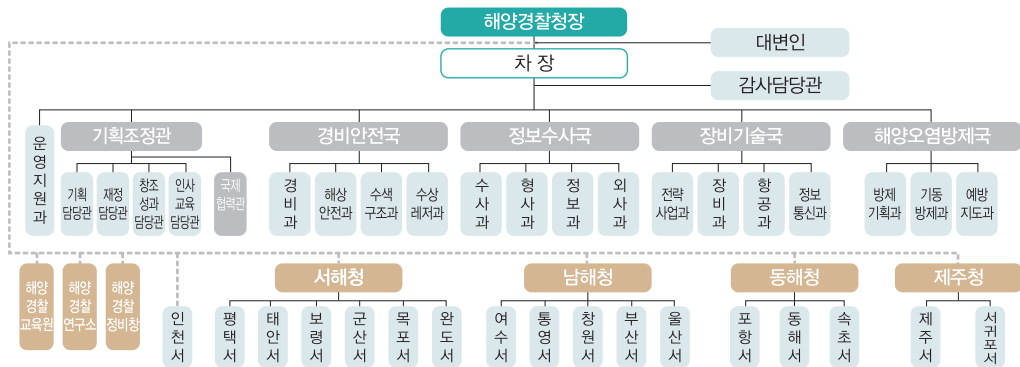
울진해경서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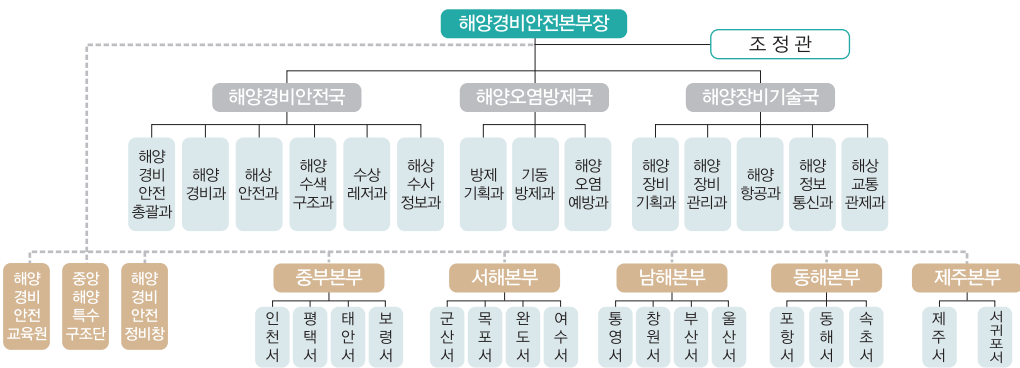
해양경찰 조직도 변천사

해양경찰청 * 2관 5국 24과/8소속, 19해경서 / 정원 10,016명

(*14.10월) 舊 해양경찰청 * 2관 4국 22과/ 7소속, 16해경서, 1직할서 / 정원 8,784명



(*14.11월) 해양경비안전본부 * 3국 14과 / 8소속 17해경서 / 정원 8,884명



(*17.12월) 해양경찰청 * 2관 5국 24과/8소속, 19해경서 / 정원 10,016명

